

내타락 胚胎한 문재인 정권의 부정·불의에 저항(분노)해야

조동근

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
<바른사회시민회의 미트콘서트>

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

-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은 의무가 된다-

조동근

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



- When injustice becomes law, resistance becomes duty.
- 부정의가 법이 될 때 국민(자유시민) 저항은 의무가 된다. (제퍼슨)
- 우리나라 지폐의 인물
- Founding father는 어디에
- 건국이 저절로 됐나?
- 뿌리를 못 찾으니. 나라운명이 부평초(浮萍草) 신세

‘분노’는 한국을 다시 세울 소중한 정치적 자산

- ◆ 국민의 분노가 LH사건·사고에 함몰되면 본질을 놓치게 됨
 - 사건·사고 일지가 문제의 본질일 수 없음
 - LH라는 毒果가 아닌 LH를 잉태한 毒果樹가 문제의 본질
 - “국가의 녹을 먹는 인간들이 이럴 수 있나”라고 흥분할수록 ‘내부자 거래’에 연루된 사람들의 “꼬리 자르기” 명분만 주게 됨
 - 설령 ‘LH 해체’로 이어지더라도 마찬가지로
 - LH를 만든 게 보수정권 아닌가라는 반전 카드를 제공
- ◆ LH 게이트를 배태 시킨 더 큰 불의와 부정에 분노하고 저항해야
 - ‘평등, 공정, 정의’ 미명(美名)에 가려진 그들 만의 잔치
 - 문재인 좌파가 주장한 “평등, 공정, 정의”는 전형적인 과다식별의 오류를 범함
 -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면 “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”

- ◆ ‘사전적 평등’과 ‘과정에서의 공정’은 구두선(口頭禪)
 -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‘수단적 가치’ 였음이 판명됨
 - 조국, 윤미향으로 ‘엄마찬스’ ‘위안부 할머니 찬스’가 회자
- ◆ 좌파에게 ‘**결과는 정의롭게**’는 ‘사후적 평등’을 의미
 - 정의를 오도(誤導)한 것으로 **정부개입의 발판(통로)**을 마련
 - 정의(justice)는 **학자나 판사에 의해 발견될 성질의 것으로**,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구의 ‘자의적인 의지’에 의해 규정되서는 안됨(『미제스, 자유주의』)
 - 시장에서 발견(확립)된 ‘**공정한 상거래 관행**’이 ‘정의’의 한 예

문재인 대통령 비상식적 인식 및 사건 접근



- ◆ ‘투기와의 전쟁’ ‘부동산 부패 적폐 청산’이라니
 - 좌파정권은 아무 때나 투기라는 용어를 씀
 - ‘자본주의 시장경제’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기 위한 일종의 언어 전술
 - 투기는 **미래를 예측한 결과적 행동**으로 시장 안정(균형)을 위한 순기능을 수행하기도 함
 - 투기는 ‘자원이동의 속도’를 높여주는 장치로, 가격 역할의 Fast track

◆ LH 게이트는 공공기관이 비대칭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한 것이 본질

- 미래 예측을 통한 행동이 아닌, **미공개정보를 이용해** 내부자 거래를 한 것임
- 미국은 자본시장에서 내부자 거래를 최대한 엄단. 증권시장이 아닌 실물시장이었을 뿐 똑 같은 범죄
- 문재인은 **범죄행위를 투기행위하고 강변**
- 싸지만 비싸질 아파트를 찾는 것을 투기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내부 정보를 갖고 그린벨트를 기웃거림

◆ 문재인은 ‘부동산 투기 적폐’를 청산하겠다고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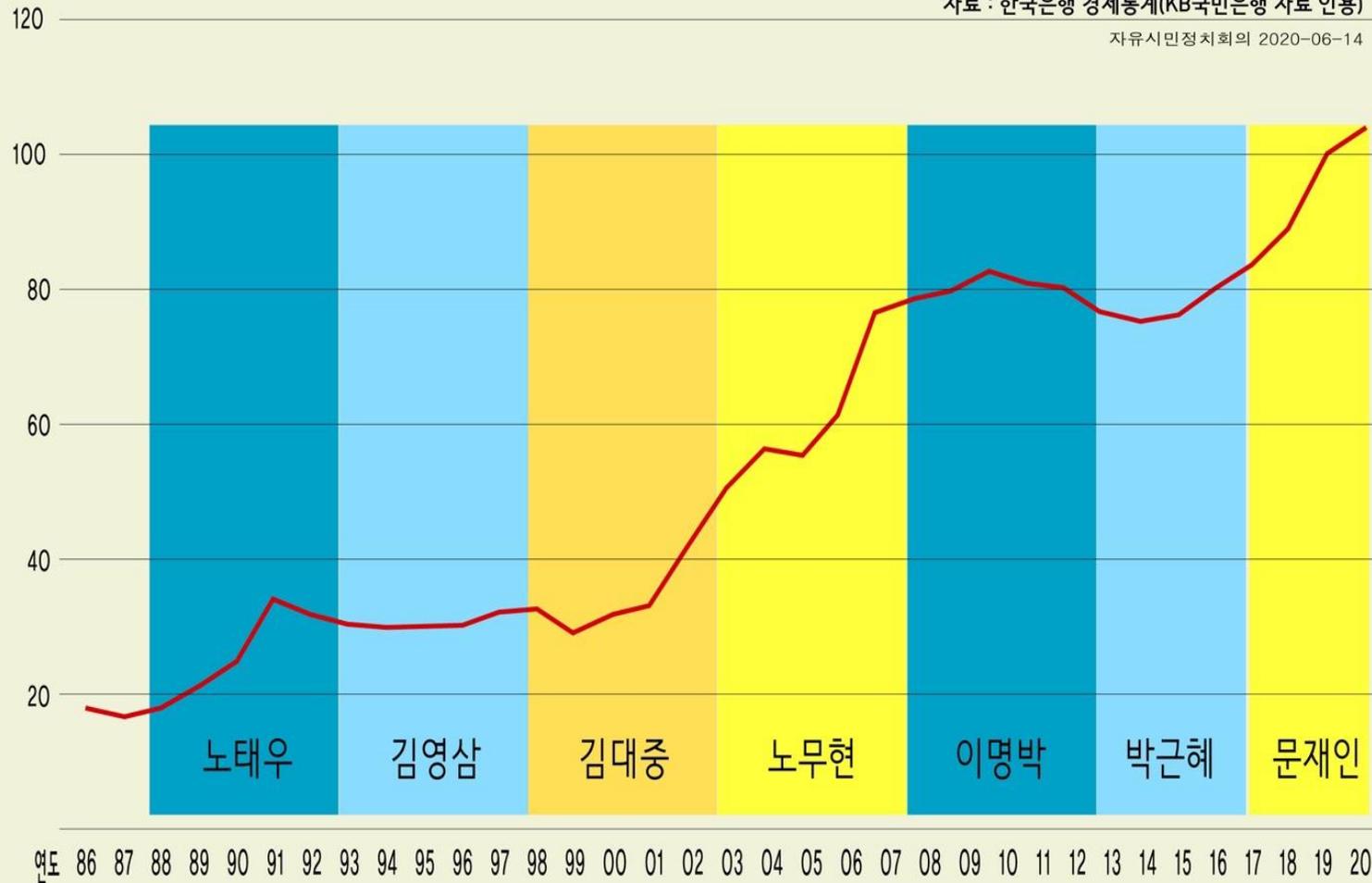
- 그는 시제를 혼돈. 문재인 어법 대로라면, 자신의 통치도 적폐로 청산대상
- ‘**현재의 정책실패**’를 적폐로 규정.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적폐로 보임
- 좌파는 前정권을 적폐로 몰아 ‘**도덕적 우월감**’의 정당성을 작위적으로 쟁취

<그림-1> 부동산 가격, 역대정부 다 올랐나

서울 아파트값 매매지수(2019년1월 기준_100)

자료 : 한국은행 경제통계(KB국민은행 자료 인용)

자유시민정치회의 2020-06-14



- ◆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(2017.5~2020.5)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52% 상승
- 박근혜 정부(2013.2~2017.3) 중위가격 상승률 29%, 이명박 정부(2008.12~2013.2) 중위가격 상승률 마이너스 3%와 극명한 대조를 이룸

비상식적 “NH 정부합동조사단” 구성

정부 신도시 투기의혹 합동조사 개요	
조사기관	국무총리실 주관 국토부 등 합동조사단
대상지역(총 8곳)	- 3기 신도시 6곳·과천 과천지구·안산장상지구 - 주변 토지가래도 조사
조사대상(수 만명)	- 국토부·지자체·NH·지방공공기관 - 전직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그 배우자·직계 존비속 - 청와대·국회·서울시는 제외
퇴직자 조사 여부	

- ◆ **감사원과 검찰이 빠진 합동조사단**
- 조사 아닌 수사 목적이어야
- 감사원 배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
- 검찰 배제는 ‘6대 범죄유형’이 아니기 때문

6대 범죄 아니라고 검찰 배제... “NH 증거인멸 기회 주는 꼴”

자료화면: 매일경제 최근호

의혹 1주일째 수사 본궤도 못올라
정세균 “국수분역당 보일 사람대”
법조계 “국민공분 큰 사건인만큼
형식 떠나 검찰이 수사 주도해야”

▶ NH 수사 체계 계속
검찰 관계자도 “검찰이 수사 방향에
관여 수사팀에 조언하는 건 현 수사권
조장안 아래서도 충분히 가능하다. 굳
이 국수분역 단일 지휘 수사체계를 고집하



정세균 국무총리(왼쪽)가 NH 정부합동조사단에서 남구준 검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신도시 투기의혹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. 연합뉴스

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근무
이력이 있는 남 본부장을 선임했다. 이
때문에 “중립성 의사가 있긴 한 거냐”
는 비판을 받았다.

검찰 배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문
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무부·행정안전
부 업무보고를 주재한 뒤 대우리 발언
에서 “검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
사건”이라며 “(검찰은) 수사 노후우. 기
법. 방점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
연 협력이 필요하다. 검찰·경찰은 보다

대통령의 오만방자한 어휘 선택



문재인 ✓

20분 · 🌐

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, 그 정도 하사지요.
좀스럽고, 민망한 일입니다.

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,
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
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.

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?
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

👍❤️👎 4.3천

댓글 556개

- 유권자인 국민에게 “**좀스럽고 민망한 일**” 이라니?
- 살기만 하지 처분할 수 없는 땅(농지)을 **왜 형질 변경?**
- 일반 공직자 보다 못한 대통령 및 주변인물(딸, 사위, 대변인)의 도덕 수준(딸 사위 대변인)
- 공직자, 재직기간 주식신탁
- 민간인, 사외이사로 선출되면 당해 주식 보유 보고의무

좌파의 공공주도 개발의 오류



- “자본주의 현실”과 “사회주의 이상”을 비교
- ‘큰 정부론’은 공공기관을 특권계층으로 만듦. LH는 시행사, 민간건설업체는 단순 시공만 담당
-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더 도덕적이고 생산적인가?
- 전형적 2분법적 선악구도 적용
- 그렇다면 **홀수 주민번호 소지자**가 더 도덕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함(여성의 경우, 미모가 출중)
- 김수현: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많아야 **정권 유지**에 유리

의식중독이 의심



2019년 국세 293조 중 부동산관련 세금 18.7조(6.4%). 지방세 포함 시 부동산 관련 세금 50조원 (GDP 4%)

이런 와중에 LH 사건이 터진 것
임

- 인류의 진보는 국가가 가진 강제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폭정에 대한 저항과 반대를 통해 달성
- 3기 신도시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
- 재산권은 자유, 생명과 같은 자연권이며, 개발도 관주도가 아닌 민간 및 시장주도 이어야 함

자유주의 VS 간섭주의

- ◆ 자유주의는 사회 일부분, 유산계급, 자본가 및 기업가의 이익을 다른 계층보다 우선시 하는 것으로 여겨짐
 - 하지만 자유주의는 특정집단이 아닌 '모든 이의 복지'를 향상시키고자 한 최초의 정치운동
- ◆ 간섭주의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향상 시키겠다고 함
 - 하지만 실제로는 약자에 대한 조작적 경계설정(게리맨더링)을 통해 자신의 지지세력 복지만 증진 시킴
 - 미제스는 마르크스가 '공산당 선언'에서 계급 간의 반목과 계급 투쟁을 이론체계의 기초로 삼았지만 그는 한 세대 동안 '계급'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. (사자와 얼룩말 비유)

- ◆ 자연법 및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“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므로 모든 이에게 같은 양의 정치적, 시민적 권리를 주어야 한다”고 생각
 - “동일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평등한 인간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.
 - 사후적, 물리적 평등이 아닌 사전적, 기회의 평등이 맞는 개념
 - **‘인간’은 평등하지만 ‘인생’이 평등한 것은 아님**
 - 간섭주의자들은 ‘인생’이 평등해여 한다고 사주

◆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위한 필요조건

- 고용주가 국가라면, 즉 자신의 생계를 국가에 의존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없음. 국가 이외에 그들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 민간 시장경제 조직, 즉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
- 사회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을 부정함으로써 개인이 경제적으로 자유영역을 갖지 못하도록 함

◆ 자본주의가 '부익부 빈익빈'을 낳는 것이 아님

- 법적인 특권을 특정인에게 허락하지 않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성공(부자)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, 만족시키는 것임
- 다른 사람의 '**필요를 읽는 눈**'을 가져야 하며 경쟁자들보다 이 같은 필요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함

미제스의 어록

- **겸손은 자유 신봉자의 미덕이고, 오만은 가부장적 온정주의자의 악덕**
-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투쟁에서 궁극적인 결말은 '무기'가 아닌 '사상'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, 또한 **무기가 아닌 사상만이 궁극적으로 저울이 기우는 방향을 결정할 것**
-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노력이 치열한 곳에서만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.(바른사회 창립취지문 요지)

공지사항 전달
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.
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.
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.